

오피니언

월/요/광/장

김영용



탕평책은 조선시대에 당파 싸움에 따른 국력 소진을 막기 위해 나온 인제 등용 방식이었다. 영조는 각 당파별 색깔을 조합한 탕평채(棠) 요리까지 제시하며 당쟁의 폐해를 막고자 했으나 그다지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극한 분열과 갈등의 고리를 화해와 대 탕평책으로 끊겠다”고 선언했다. 지역과 성(性), 그리고 세대 구분없이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겠다는 것이다. 당선자와 가깝다고 등용하고, 멀다고 등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바람직한 인사 원칙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통령이 탕평 인사를 명시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았으나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겠다는 인사 원칙을 중시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잘 실현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고된 인제 등용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또 어떤 조건 하에서 탕평 인사는 바람직할까?

인사에서는 우선 정보 부족의 문제가 따른다. 권력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직접 모든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기는 어렵다. 당연히 핵심 측근들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기용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

탕평인사 어느 정도 가능할까?

를 역시 파추천인의 범위와 각 개인에 대해 제한된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예전과는 달리 정보 유통 수단의 발달로 그 흐름과 소용이 더 원활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보 제한이라는 근원적 한계는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의 탕평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 의지에 미치지 못하는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보의 제한성을 상당한 정도 극복하고 대통령의 국정 이념과 철학을 함께 하는 인사들을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문자 그대로의 탕평 인사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자칫 이념, 지역, 성별, 세대 간 안배라는 외형적 탕평 인사가 된다면 의도하지 않게 국정 자체가 난맥상에 빠질 수도 있다.

대통령이 모든 국사를 일일이 챙길 수 없는 마당에 상당한 권한과 책임이 장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임되기 마련인데 이들 간의 이념과 철학의 충돌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는 제3의 길이 가능한 체제가 아니라 는 사실로부터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제3의 길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점을 살린 적절한 조합으로 각 체제보다 더 나

은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두 체제의 이념, 가치, 방법론 등이 서로 충돌하면서 작동하지 않고 결국 한 체제로 수렴하는 결과를 낳는다. 자본주의의 운행 원리가 강조되면 자본주의 체제로, 정부 개입이 강조되면 사회주의 체제로 수렴한다. 그런 점에서 제3의 길은 없다. 외형에 치우친 탕평 인사도 그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논공행상과 최고 권력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권력 다툼은 파하기 어렵다. 취임 당시 대 탕평 인사를 바탕으로 정권이 출범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사는

결국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다. 이는 물론 최고 권력자의 용인술에 크게 의존하는 사항이지만, 정권 내내 시종일관 탕평 인사라는 원칙 고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탕평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차라리 잘 아는 사람들 중에서 이념과 가치 체계 등 사상적 기초를 공유하는 인사들을 등용하여 국정을 펴 나가는 것이 더 나은 길이 될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탕평 인사 원칙에 따라 호남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기용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물론 장관이나 공공기관의 장(長) 등도 몇 자리 할애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정치적으로 고립된 호남 지역 차원에서 보면 상당한 위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호남 인사가 대거 기용되리라는 기대도 크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 상할 일도 아니다. 그보다는 호남인들이 호남지역은 물론 나라 전체를 위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경제적·정치적 소리를 탈피하기 위해 새롭게 고려할만한 전략적 사고는 없는 것인지를 폭넓고 깊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 2013년 새해 계사년을 맞이하는 호남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다.

〈전남대 교수·경제학〉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기고



허민

신년 초하룻날 호주 친구한테서 연하장과 함께 무등산국립공원 승격을 축하한다는 메일을 받았다. 이 친구는 영문판 한국 신문에서 무등산 관련 기사를 보았다한다. 엔디 스페이트라는 호주 친구는 본인과 함께 오랫동안 제주도, 남해안공룡화석지 등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세계지질공원 일에 함께 참여했던 이 분야의 전문가다. 지난여름에는 이곳 광주에서 개최된 제11차 세계생태대륙생태학회에 참여해 무등산 주상절리대 일대 세계화방안에 관한 특별 세션에서 본인과 함께 무등산의 세계화방안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연유로 그는 누구보다도 무등산에 관심이 많은 친구다. 새해 벽두부터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아무튼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2월 27일 광주 무등산이 1972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0년 만에 우리

무등산 희망가

협조가 잘 된 셈이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광주시민의 힘이라고 여긴다. 물론 여기에는 현지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 사업에 대해 이해시킨 광주시나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들의 숨은 노력도 있었겠지만 30년 이상 무등산과 함께하고 있는 무보협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광주시민 및 화순, 담양군 등 전남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심사를 온 교수 한 분은 앞으로 광주가 새로운 일들을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롤모델의 도시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섞인 이야기를 했다. 그저 고마울 뿐이다.

더욱이 무엇보다도 강한 추진력으로 대사업을 성사시킨 가운데 광주시장의 열정적인 노력 과정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올해 광주시 정부예산 가운데 무등산에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는 더더욱 그렇다. 이런 연유로 지난해 12월 27일 국립공원 축하 리셉션에서 보기 드물게 무보협이 광주시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앞으로 970억원을 무등산에 투입하겠다고 하니 그저 고마운 일이다.

법조칼럼



조희영

오전 출근길에 종종 택시를 이용하곤 한다. 택시에 타 목격자를 ‘검찰청’이라고 하면 많은 택시기사들은 “잘못한 죄가 없는 데, 괜히 무섭다”고들 한다. 독자들은 ‘검찰청’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는가. 출근길에 만난 택시기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검찰청을 막연히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검찰청은 왜 ‘무서운 곳’일까. 아니, 검찰청은 정말 ‘무서운 곳’인가.

검찰청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해 공소를 유지하며, 형을 집행하는 법무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렇게 하고 보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검찰청은 ‘무서운 곳’일 수 있겠다. 아니, 당연히 무서운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당사자로서, 또는 그 당사자들의 주변인들로서 검찰청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보다도 검찰청을 접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검찰청을 경험해 본적도, 잘못된 적도 없는 선량한 일반 시민들에게조차 검찰청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청은 ‘무서운 곳’인가

필자가 그 정확한 원인을 진단해내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감히 추측하건대 검찰이 행사하는 권한이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비춰져서 아닐까 한다.

언론에 거론되는 사건들은 대부분 정치·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중요사건, 대형사건인 경우가 많다. 그러한 사건들 속의 범죄자들에게는 그들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감금을 겨누는 검찰청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 또한 크게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지켜보는 선량한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도 검찰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무서운 곳이 돼 버린 것은 아닐까. 물론 이러한 중요사건, 대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였을지도 모를 잘못된 검찰권의 행사도 한 몫 했으리라.

그러나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검찰은 이러한 대형사건들만 처리하는 곳이 아니다. 당장 내가, 그리고 내 가족, 지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일반형사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다. 내가, 내 가족과 지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청은 그때 바로 피해자들의 든든한 배심목이자 지지자가 돼 줄 수 있는 곳이다. 앞서 살핀 검찰청의 의미를 다른 면에서 생각해보면, 피해자 대신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자를 밝혀내 기소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곳인 것이다.

또 검찰청은 이와 같이 범죄자를 처벌함

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구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피해자 구조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치료비나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검찰청 내 피해자지원실을 운영하면서 장해구조금, 유족구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필자는 검찰청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가 피해자들로부터 “검찰청이 무서운 곳인 줄만 알았으나 직접 겪어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단순한 폭력사건이나 소액의 사기 사건 등은 어찌 보면 소소한 일반 형사사건일지 모르나, 피해자들에게는 어떠한 큰 사건보다 중요하다. 또 의지할 곳 없이 힘이 들고, 외로운 피해자들에게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쁜 곳이 돼 주며, 그들에게 피해를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박 당선인의 ‘광주 도심하천 복원’ 주목한다

광주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40년 만에 양동복개사가 철거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복개사가의 철거는 광주 도심하천의 생태복원과 양동시장 현대화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광주지역 공약으로 광주천 복원 및 복개 구간 철거, 호남 최대 재래시장인 양동시장 현대화 사업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천 생태복원사업의 첫 단추인 양동복개사가를 철거한 뒤 상가 이전과 함께 상가 아래로 흐르는 광주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1970년대 초반 광주천을 복개해 상가들이 들어선 양동복개사가는 대지면적 9천662㎡에 361개 점포가 들어서 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3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광주천 생태 복원을 위한 천변구역 재개발 사업과 융복합 등 지천 생태하천 복원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조만간 상

인들과 협의를 거치는 등 관련 사업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실, 광주천 복원과 양동시장 현대화는 광주시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광주천이 옛 모습을 회복해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 자체로서도 감동적인 일이다. 양동시장이 현대화되는 것도 상인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더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 확보가 관건이다. 3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가뜰스나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가 상당 부분 떠안는다면 오히려 ‘짐’이 될 수밖에 없다. 국비 중심으로 사업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역시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만큼 대통령 임기 내에 이 사업이 가시화돼야 한다. 호남에 대한 진정성은 인사의 지역적 안배와 공약의 실현이 그 첫 걸음이다.

시교육청 근평방식 1년만에 변경하다니

〈勤勞〉

광주시교육청이 1년 만에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식을 다시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공청회 등을 거친데다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만든 개선안인데도 일방적으로 바꿨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급 이하 지방공무원에서 국가직립공원,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제 무등산은 한반도를 끼안고 세계인들도 끼안을 준비를 해야 한다. 무등산의 세계적 학술가치와 그동안 보존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관리 계획이 무등산 세계화에 중요한 평가 요소이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는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열성적인 노력과 참여다.

그리 쉽지 않은, 그러나 가야 할 먼길 일지 언정 한 뼘 한 뼘 실을 엮는 심정으로 함께 나아가면 우리는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무등산을 자랑스럽게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광주의 어머니 무등산은 항상 제자리에서 우리들에게 말없이 희망을 주고 있다. 빛의 도시 광주에서 민주와 인권도시 광주로, 아시아 문화전당의 광주에서 이런 세계인들과 함께 유네스코 도시 광주로 이어지는 날을 기다려 본다. 지난 대선 결과로 다소 움츠러든 우리들에게 무등산은 새로운 희망의 선물을 안겨주고 있다. 오늘날 무등산 아래에서 살고 있음이 행복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남대 교수·한국공통연구센터 소장〉

無等鼓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은 ‘쌍 한조각 흠친 죄로 19년 옥살이를 한 남자,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 흐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옥을 그려 낸 대가’였듯, 나는 현실을 이용해 지옥을 만들어 내려 했다’는 자자의 말처럼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레 미제라블’에는 프랑스 민중의 비참한 삶과 사회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일어났던 지식인들의 1832년 6월 봉기 모습 등이 생생히 담겨 있다.

주인공 장발장을 비롯해 자베르, 판타, 마리우스, 코제트 등 매력적인 등장인물들과 함께 수십년의 세월을 넘나드는 ‘레 미제라블’은 역사, 사회, 철학, 종교 등 ‘인간사’의 모든 게 축적된 ‘대서사시’로 평가 받는다.

‘한 인간의 작품이라기보다 자연이 창조해 낸 작품’(테오필 고티에)이라는 칭송을 받는 ‘레 미제라블’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설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방대한 분량(한글판 완역본은 출판사에 따라 250~300페이지 5권 분량) 때

문에 압축한 사람은 많지 않았었다.

출간된 지 150년이 넘는 ‘레 미제라블’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인기리에 상영중인 뮤지컬 영화 ‘레 미제라블’ 덕분이다. 1985년 영국에서 초연된 뮤지컬이 원작인 ‘레 미제라블’은 관객 400만명을 넘어섰고 그 열풍은 출판, 음반, 뮤지컬 업계까지 확산 중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시각은 여러가지다. 어떤 이들은 ‘I dreamed a dream’ 등 아름다운 뮤지컬 넘버와 휴 잭맨, 앤 해서웨이 등 배우들의 열연 등을 든다. 무엇보다 관객들이 대한민국 현대사와 묘하게 겹쳐 보이는 영화 속 장면들에 옷맛이 몰입하는

점을 흥행 요인으로 꼽는 시각이 많다. 특히 광주 시민들에게, 혁명군이 부르는 ‘Do you hear the people sing?’이 울려 퍼지는 ‘레 미제라블’은 단순히 영화가 아니라 ‘5월 그날’을 불러낸 떠난 자와 살아남은 자를 위로해 주는 치유제가 되고 있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kwangju.co.kr



‘레 미제라블’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博榮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어문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국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